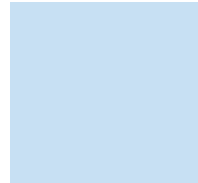


January 2015 | vol.66

#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 ○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강병수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 도시공동체 재구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  
: 정순오 한남대학교 교수
- 정부 3.0과 안전도시, 대전  
: 한부영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 포럼 위원 토론 요약

### ○ 이슈대담

- 평택시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 공재광 평택시장

### ○ 이달의 Issue

- 재정투자사업관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66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 편집위원장 금창호  
간사 전대욱 위원 주재복 윤영근 김도형 김성주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http://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mailto: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http://www.krila.re.kr)

2015.01

# CONTENTS

January 2015 | vol.66

## 이달의 Issue

— 재정투자사업관리

### 05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강병수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 도시공동체 재구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  
: 정순오 한남대학교 교수
- 정부 3.0과 안전도시, 대전  
: 한부영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 포럼 위원 토론 요약

### 15 이슈대담

- 평택시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 공재광 평택시장

### 21 논단

-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한 기대
- 지방투자심사제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
-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의와 향후 발전과제

### 41 지방자치단체 탐방

- 도심 속에서 낭만의 예술공간과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평택시

### 47 연구원 동정



05



15



41

##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중)은 지난 2013년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 박재창 교수, 이승중 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 박재창(한국외대 교수), 이승중(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정부(중앙, 지방)-학계-연구원 등 55인의 인원 구성
- 구성 원칙 : 지방자치 관련 학(행정학, 재정학,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 및 대학, 언론 등)-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협의회)-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계에 의한 지방자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중기 발전 모델 :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며 지역순회를 통한 국민 담론의 장으로 발전

### 기조연설

- 1회 :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2회 :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 3회 :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김동완 국회의원)
- 4회 : 다원주의적 지방거버넌스의 진화(이달곤 前 안전행정부 장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5회 :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 6회 :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발전정책(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7회 :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8회 :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김문수 경기도지사)
- 9회 : 지방자치, 새로운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10회 : 지역발전, 환경문제 그리고 국민행복(윤성규 환경부 장관)
- 11회 : '국가개조'와 지방자치(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 12회 :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13회 : 국가와 지방의 재정협력(박재완 前 기획재정부 장관)
- 14회 :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15회 : 협치로 여는 제주의 미래(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강병수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대전광역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6회 지방자치실천포럼

공동 세미나 발제 및

토론 요약

## 〈1. 발표〉

창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전체적으로 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시정구호인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의 의미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대전”을 의미합니다. 민선6기 창조경제는 2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R&D 연구개발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조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창조경제 공약사업 중에서 첨단산업 단지 조성 추진,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가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R&D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이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지자체 스스로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연구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서울의 30% 수준이고, 연구개발비는 5조 5709억 원으로 전국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비는 4조 4천억 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지만, 사업비 투자에 비해 사업화 건수가 적습니다. 지식창출의 면에서 보자면, 대전의 SCI 논문은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허 출원은 24.2%, 기술료 징수는 11.1%, 기술료 징수액은 19%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1인당 GRP(지역총생산)는 2천만 원 정도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이 이렇게 투입에 비해 성과가 적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사업투자계획은 R&D 분야에 거의 모든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추진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략산업으로 나노융합과 정보통신을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1인당 GRP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대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이 모든 분야에 녹아들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면, 권선택 시장의 창조경제는 지역·도시 단위에서 어떻게 창조경제를 이룰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전의 문제는 대기업, 즉 주도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플랜트가 하나 들어오면 연구개발 및 투자결정을 위한 조

직들이 플랜트 옆에 와 붙게 됩니다. 자연히 공급자와 수요자도 옆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이 도약 단계로 들어가고 기술 창업계의 스피노프가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 수요가 생기면서 생산자 서비스 부분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전에 생산자 서비스가 부족한 이유는 대전이 아직까지 이 단계에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연구단지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주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생산 기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자본들이 지역 기업과 연계되어야 대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순오 한남대학교 교수

## 도시공동체 재구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시 재생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누구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여야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내는 주체다.”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말처럼, 도시 재생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낸 문제이지만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전의 도시 내 격차가 심각합니다. 대전은 동부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2011년 기준 77개 중 27개동이 쇠퇴지역이고 25개동이 정체지역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읍·면·동의 65%가 정체 내지 쇠퇴지역입니다. 정부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는 현실입니다. 도심 쇠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작정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무대책입니다. 대전의 경우 25년 동안 외곽 교외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개발한 것은 많으나 내부 개발은 매우 적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도시 재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도시 격차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산업, 소득, 인구가 이동하면서 동서 격차가 심화되어, 구도심 지역에는 저소득, 노령인구 증가 등의 현상이, 신도심 지역에는 고소득, 교육인구 집중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활발한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정치권,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연대하여 외곽 개발을 부추겼고, 반대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도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실 있게 도시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이 분양 가치를 높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넣어줘야 하는데 그런 전략 없이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전의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2030을 보면, 낙후된 지역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낙후된 산업경제는 창조경제와 사회적 기업으로, 노령화사회는 자조복지공동체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전의 현실과 동떨어진, 해외의 일반적인 성공사례를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보편화시켰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주변적이거나 정치적인 과제를 해결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 재생의 문제는 국가적 딜레마에 빠져 있고, 모든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이며, 서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민간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원도심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업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낙후지역에 사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 부족한 것보다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지 시민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에만 맡기려 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가 도시기업가적 입장에서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부영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 정부 3.0과 안전도시, 대전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은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입니다.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나, 이제는 예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욕구 변화, 기후 및 환경 변화, 기술 발달로 인한 대응 역량 강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활안전, 급식, 사고, 손상 등의 문제까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의 의미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에서는 안전을 국가의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3.0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정부 내부적으로 민간과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개혁을 말합니다. 지향점은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부 3.0을 통해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재난이 특수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자연히 안전에 대한 분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련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위협예보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개방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알려져 있는 것을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시”를 비전으로 재난과 연결시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민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사가 면허를 취득하면 재난 발생 시 4시간 의무 봉사를 약속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습니다. 재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전문인력을 참여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이 독일의 자문관제도입니다. 대전은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화학·원자력·생물학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력풀을 만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에 조직되어 있는 자원들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관-관 협업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 민-민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재난 초기에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해 봅니다. 지역 안전관리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소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자문관 제도를 실재화하고, 민-관 협력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관이 민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I. 토론〉

### 강형기 충북대학교 교수

대전은 과학기술이라는 엔진이 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날개가 없다고 봅니다. 대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문화, 경제 계획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가 되려면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뽑아내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발을 일구는 도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없이 경제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도시, 창조경제의 주역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및 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소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연계되어야 창조도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기를 끌어올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정책이 기업 친화적에서 인재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창조적 인재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환경이 함께 정비되어야 탄생한다고 봅니다. 문화적 환경 정비 없이 첨단 산업 이런 것만 외치니 안 되는 것입니다. 노쇠한 도시에 간판만 창조라고 붙인다고 창조 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살터, 일터, 놀터가 있어야 하는데 대전에는 일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철 前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위치적 이점입니다. 또한 산업 인력이나 인적 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아쉽게도 쇠퇴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곳 또한 대전입니다.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쇠퇴 현상과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쇠퇴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지금 대전에서는 재생이라는 키워드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사람도 자꾸 빠져 나가니까 수요에 의한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지역을 살펴보면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 〈II. 토론〉

대전은 근린재생형을 다른 도시보다 먼저 경험한 도시입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세련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추진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속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 재생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고, 따라서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대전을 생각하면 연구단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역사나 문화 부문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도시 재생을 할 때 대전이 가진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길 기대해 봅니다.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의장

대전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예산, 전문성, 기술성을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전 진단 통합 시스템, 안전검사, 점검, 예방뿐만 아니라 감리까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리, 안전 진단 관리감독 시스템의 수준과 환경 차이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대전 안전의 열쇠라고 봅니다. 안전 취약지역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잘 안 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각종 생활안전에 대비하고 훈련하여, 유사시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난별, 시간대별, 상황별로 현장 대응 방안을 만들어 일반 시민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교육하고 참여시켜 재난 안전 관리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대전 발전에 대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병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R&D 역량 강화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영컨설팅과 같은 지원서비스가 부족해서 기술사업과 연결되지 않는 점, 지식과 서비스산업을 육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첨단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서 대전의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추진 주체들의 기능상의 문제점 등을 앞으로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대전의 발전을 위해 참여연대 입지 강화, 시장의 리더십, 역사 및 문화 도시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오 교수님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대전의 여러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지역 간 격차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신도시 개발을 억제해야 원도심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연구 방향으로 잡아봐야겠습니다만, 신도시 개발 억제가 시장님의 경제 논리에 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부영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재난 발생 초기에 대응할 자문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 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조성민 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장

안전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 정책이 주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체감지수나 안심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현장성과 행정기관이 느끼는 대응성 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도심 개발에 대한 부분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항상 원도심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에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충남도청 이전 이후 발생한 공동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시 예산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



## 〈II. 토론〉



나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정부 3.0과 관련해서는 칸막이 해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률 같은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맞춤형 대응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관리의 경우, 복지 및 보건 분야가 따로 떨어져 있어, 통합적인 사회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대전의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카이스트를 비롯하여 훌륭한 인재가 많습니다. 과학기술 도시라는 측면에서 대전과 드레스덴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대전이 앞서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지금의 대전은 도시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

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만, 대전이 창조도시를 지향하려면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고 돈만 벌고 가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계획, 건축 등에 대전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공동체를 활용하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과거의 도시를, 소규모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시로 바뀌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도심 개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규모로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리: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재광 평택시장

# 평택시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일시 및 장소 2015.1.19.(월) 평택시장실  
인터뷰 대상 공재광 평택시장  
인터뷰 진행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재복 연구위원**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는 소통과 융합을 바탕으로 평택시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  
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 평택시가 초일류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입주해 반도체 생산의 전  
진기지가 되는 고덕산업단지, 신수중 사업과 고부가가치 전자 제품이 출시되는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업단지, LG디지털파크 산업단지와 여러 산업단지들  
의 조성으로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이끌고 있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 수도권 KTX와 수출입 전진기지 평택항의 활성화로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친화적 친수형 관광단지로 아시아권 최대의 관광 레저 휴양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평택호 관광단지'는 평택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평택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경제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평택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첨단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재광 시장** 지난 10월 6일 삼성전자는 고덕산업단지에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2015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장 라인을 가동해 제품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시와 경기도의 끊임없는 조기투자 요청과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년 앞당겨 조기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삼성전자의 투자를 계기로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평택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7개 전담 T/F 팀을 구성해 삼성전자 조기 가동을 위한 공장 건축,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 등 총 23개 분야에 걸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93만㎡(약120만 평) 규모의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삼성전자 부지는 총 283만㎡(85만 평) 규모입니다. 이중 79만㎡(24만 평)을 활용하여 인프라 시설과 첨단 반도체 라인 1기가 건설되며, 고덕산업단지 전체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생산직, 관리직, 연구직 등 총 3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 삼성전자 협약체결

도 1천억 원 이상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에 반도체 신규라인이 건립됨으로써 경기도는 기흥-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입주로 미래 신수종 사업과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생산이 기대됩니다.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업단지는 98만㎡(약 30만 평) 규모로서 LG전자는 이곳에 산업용 냉동공조설비, 조명산업 등 미래 신수종 사업과 고부가가치 전자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입주 계획이 마무리되면 약 1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현재 관내에는 10여 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62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을 중심으로 교통·정보 인프라 및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국 전진기지이자, 대규모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평택을 이끌어갈 고덕신도시 조성 사업은 택지 1,342만㎡(406만 평), 고덕산업단지 393만㎡(약 120만 평), 총 1,735만㎡(약 526만 평) 부지에 수용인구 13만 5천 명, 사업비 10조 4천 4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는 2013년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행정 및 업무시설이 들어설 2단계 공사와 에듀타운 중심으로 개발되는 3단계 사업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첨단기업들이 평택시로 몰리는 이유는 평택시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재광 시장** 전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아우르는 촘촘한 교통망은 평택이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교통물류도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1번 국도, 국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더불어 수서-평택 간 KTX 역사도 2015년말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X 수도권 역사는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4,300백만 원을 투입해 역사 역무 시설, 환승통로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택시와 버스 승강장과 주

차장이 갖추어진 광역환승센터도 2016년 완공됩니다. 새 역사와 광역환승센터가 건설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KTX 이용이 쉬워지고, 시간도 단축되어 수서와 평택은 20분, 부산은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전국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



▲ KTX 신평택역

통 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화물 실적 4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평택항은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총 79개 선석이 개발되어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교류와 권역경제성장의 거점항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시장님께서서는 평택시를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재광 시장** 친수형 복합 글로벌 휴양지로 손색없는 자연환경을 갖춘 ‘평택호 관광단지’가 새롭게 거듭나는 수순을 밟고 있어 평택시와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큼니다.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경제적 이익과 함께 고용 증대, 국위선양 국제 친선 및 문화 교류 차원에서 놀랄 만한 상승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다와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잘 가꾸어진 숲과 산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평택호관광단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가 주목하는 친수형 복합 글로벌 관광 휴양지로서의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에 평택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년 관광지로 지정되고, 일부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재정적인 지원의 한계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 지

정해 적극적인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해 2013년 SK컨소시엄이 1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제안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진행,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며 적격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평택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3차 공고 등 사업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 관광, 쇼핑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복합 관광휴양단지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먼저 하버타운(Harbor Town)과 에코프론트(Eco Front)가 들어설 권관리 일대는 2만㎡(약 6천 평) 규모의 씨티팜(생태체험관)과 아쿠아랜드, 국내 최대 규모인 110미터 대관람차(평택아이)를 설치합니다. 대관람차는 20~30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30여 개의 캡슐로 건설되며, 지상의 레스토랑과도 연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쇼핑몰과 차별화된 대규모 아울렛과 전망데크, 로드샵들이 들어서 평택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명소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전문학교’가 단지 내에 설립되어 관광단지에서 종사할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해 취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이 프론트(Bay Front)와 레이크 사이드(Lake Side)가 조성될 마안산 인근의 대안·신왕 지역은 휴양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들로 개발됩니다. 마안산을 중심으로 산림욕장·풍욕장·숲속 갤러리 등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꾸며지며, 레이크 콘도, 플라워 콘도, 호텔, 컨벤션 센터 등 숙박시설과 회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아울러 캐널랜드(수변공연장), 디지털 아쿠아리움, 다문화체험센터



▲ 평택호 관광단지 조감도



등 문화 및 놀이시설이 건설되어 가족이 함께 손잡고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며, 마리나클럽하우스, 낚시터 수상 레포츠 공간과 함께 수상택시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어지면 현덕면 인근 서부 지역의 발전에 속도가 붙어 지역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오랜 시간 동안 미개발에 따른 상대적인 발전의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의 약속도 이행되어 평택호 관광단지는 평택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로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4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평택시는 연평균 20여 억 원의 재산세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는 5년 동안 약 22,300 명의 인력이 이곳에서 일하게 되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11,800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어 시민들의 취업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택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의 다음 단계인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보상 및 공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마지막으로 평택시민들에 대한 시장님의 다짐이나 부탁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8년 동안의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택시를 대한민국의 경제신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평택시는 최첨단산업도시, 교통물류도시에서 풍요로운 관광문화체험도시로 거듭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 되도록 시장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눈높이를 낮추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소통과 화합 속에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천혜원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행정사무관

“용인 경전철사업은 용인시와 용역기관이 은밀히 협의하여 교통수요 예측을 3배 이상 부풀려 B/C 비율을 높임”(검찰조사 결과 '12.4.5.)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 용인시.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부자도시였지만 지금은 빗더미에 앉아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가용재원도 2년 전에는 3,700억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반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향후 3년간 용인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만 5,150억 원이나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용인경전철의 졸속 개통으로 빚어진 것이다.”(경향신문 '14.3.31)

위의 용인경전철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부실한 타당성 조사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09.1월)하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다보니 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수요를 부풀리는 점, 타당성 조사기관 대부분이 엔지니어링 업체 위주로 선정되어 기술적 측면의 분석은 가능하나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등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14.11월)하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

부 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하여 자치단체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4.11월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정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투자심사 제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약 남발과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기위주의 선심성·전시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및 재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투자심사 제도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투자심사 시에 ①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⑦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등의 7개 분야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로 ① 적정(사업 타당성 인정), ② 조건부(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대책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추진), ③ 재검토(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채무상환계획 등 종합적 재검토 필요), ④ 부적정(사업 타당성 없음)의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1〉 투자심사 추진 절차



## 타당성 조사 제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전단계에 수행해야 할 절차로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의무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에 사업추진 여부 및 계획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재조사도 추진토록 했다.

타당성 조사는 투자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을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인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가 사업기본계획,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자료를 첨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타당성 조사가 사업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추진되어 지방재정적 측면의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및 재무성 검토, 정책적 타당성 검토, 지역균형발전 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적격여부를 종합평가하며, 타당성 조사 결과의 투자사업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이를 투자심사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타당성 조사는 절차상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고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근거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며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사업을 적정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종합하여 국가예산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달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지방예산에의 반영여부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만 역할을 할 뿐이고, 실질적인 결정은 정부가 주관하는 투자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의 제한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의 투자사업에

대한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투자심사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성 조사가 지방투자사업 추진에서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참고자료'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용인을 지역구로 하는 한 국회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된 점,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 등을 들어 용인경전철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이 도출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도출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의 의미를 고려할 때 초기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시 연구진 구성방법,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 조사결과에 대한 품질검증 및 최종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합의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지침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사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ISTEP 등 유사 국책 연구기관과 업무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타당성 조사의 노하우를 공유·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시에는 자치단체 별 재정여건, 주민구성, 지형적인 특성 등의 지방투자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사업추진, 운영 전체적인 단계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누적·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사업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지방투자사업 정책개발이 가능하고, 자치단체도 그간 투자사업 추진사례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

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타당성 조사 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타당성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자치단체가 조사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고 이해관계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담당자가 타당성 조사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뿐 아니라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배워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 제도는 지방이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투자사업 추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 화살을 타당성 조사 결과의 부실성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기 설립된 시·도 산하 투자관리센터 등 유사업종 경쟁자들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행보를 눈여겨 보고 있다는 점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이러한 때 최선의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 즉, 타당성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는 사실상 첫 해연도로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지방투자사업에 있어 어떤 입지를 가질지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자치단체의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자립매김하길 기대한다.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한 기대



김난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부문의 투자우선순위의 설정 필요성 대두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의 하나는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제약조건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상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약조건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재정 여건보다는 경제발전과 성장이 우선이던 시절에는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다. 그 당시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 추진이 최우선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복지, 교육 등 재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지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세입의 증가보다는 세출의 증가가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도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공공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대규모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비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율이 60% 수준임을 고려해 보면, 지자체 중 대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서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주요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한 가지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4년 말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재조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어 오던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러한 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 내부의 노력; 전문성과 일관성의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에도 지침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상세해지는 진화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도 타당성 조사에 있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일관성있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타당성 조사에 응하게 되는 지자체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본 틀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거의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의 지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비와 국비 규모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과의 차별성을 둘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타당성 조사 지침 수립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센터의 설립을 통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침의 마련만큼이나 지침의 적용에 있어 타당성 조사의 독립성과 일관성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전문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타당성 조사를 받는 주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센터 내부에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인원의 전문성 제고

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과거에 도로, 건축물 등 정형화 사업 위주이던 지자체의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최근 들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그 모든 유형의 사업 분야 전문가를 내부에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수행 업무에 대한 내부 연구진의 정확한 내용 파악과 여타 사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 자료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 연구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발생할 경우 센터 자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내부 인력 간의 상호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당성 조사 분석의 결과 그 당락을 도출해 내는 타당성 조사의 결과 외에도 대안의 제시가 중요할 것이다. 절대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한 타당성 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논란과 일부라도 남아있게 되는 정성적 분석 부분, 그리고 그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통합 분석 과정 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비판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시된 사업의 내용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못한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사업 추진이 좌절되기보다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외부의 노력; 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보장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 독립성의 문제일 것이다. 결국 본 센터의 운영과 타당성 조사에 따르는 예산을 지급하는 주체의 역할이 센터의 독립성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지자체 연구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연구기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결과 산출에 대한 신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존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예산이 나오는 지자체의 의지를 거슬러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본 센터도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려는 많은 노력들 속에서 센터가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을 것인지가 센터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오든, 기획재정부에서 오든,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는 지자체에서 오든 예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독립성과 객관성의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대의를 위해 예산의 출처가 어디이든 투명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의 대의는 사업의 추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독립성과 객관성은 센터 내부보다는 센터 외부에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형성될 때 센터 내부에서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틀에 대한 결정 필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기념 세미나에서 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사업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센터 고유의 방법론 및 고도화된 분석기법 개발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기획재정부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즉 총 사업비 500억 원~2,000억 원 미만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총 사업비 500억 원~2,000억 원 미만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새로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와 시행 근거가 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다. 본 근거법과 기본계획에 의하면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고시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투자심사, 즉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간투자기본계획 제 65조(타당성분석)에 따르면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를 본 센터가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고시사업의 이 단계에서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분석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

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과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고유의 방법론 및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민간투자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추진 단계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일관성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자사업의 분석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벗어나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만일 어느 한 센터의 분석틀이 타당성 확보에 이롭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규모 축소 등 이로온 분석의 대상사업으로 재구성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에 소폭 미달되는 사업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다년간 수행해 온 지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한 기대감 제고와 우려감 불식 노력 필요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문화시설과 같은 비정형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묻게 된다. 조직의 존폐도 결국 비용-편익분석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조직의 존재 이유도 결국은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 조직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자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도 이러한 맥락에서 센터 자체의 비용을 과다하게 절감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더 큰 편익을 창출해서 존재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정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수요자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WTP(Willing to Pay; 지불의사)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국 전문성과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외부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지금의 우려감이 불식되고 기대감과 신뢰가 쌓여 센터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목적에 어느 순간 도달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지방투자심사제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

## 지방재정의 여건과 지방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

최근, 계속되는 경기 둔화에 따른 국가 세입결손의 발생과 복지 재정수요의 확대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이양) 갈등문제는 상존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세출수요에 크게 미흡한 자주재정의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총부채 규모는 거의 10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채무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증폭이 계속되고 있어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이 지방자치제에 거는 기대마저 흔들리고 있다. 예컨대, 부채에 의존한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 용인시 등의 경전철, 민자사업의 실패,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사업 등 지방공사를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같은 일부 자치단체의 불건전한 재정운영 문제가 전체 지방재정의 위기 문제로 확산되어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지방재정의 위기나 파산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투자심사제도가 존재하여 왔고,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타당성 조사가 현행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1992년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전 절차로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재원조달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따르는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왜 제시되지 못하였을까? 그간의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와 타당성 조사기관 간의 용역에 의한 갑을관계에 따른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이 확대되어 왔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지방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지자체의 요구가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의 폐해가 있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현행 투자심사단계가 자치단체별 자체심사 - 시·도심사 - 중앙심사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심사 통과율이 자체심사는 약 98%, 시·도심사가 90%로서 중앙투자심사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어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지방투자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거나 철저한 사전준비가 없이도 전신성, 행사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온정적인 투자심사로 엄청난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설립 배경

상술한 바와 같이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대형 투자사업들이 추진되어 실패로 이어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고 나아가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다.

따라서 세출수요의 급증으로 가용재원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공단 등이 추진하는 지방투자사업에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방투자사업의 투자결정체계에 대한 합리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투자심사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조망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예산절감과 품질개선에 대한 유인구조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환언하면, 현 단계에서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의 시행절차, 즉 의사결



정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소위, 갑을관계 하에 이루어졌던 과거의 대형 지방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방식을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심사기관의 별도설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투자사업의 시행절차를 개선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방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부수적인 과제들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투자사업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같은 사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즉,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37조 2항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정·고시하였고, 이에 2014년 12월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간의 지방투자심사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활용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산하에 신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①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② 타당성 재조사(지방투자심사규칙 제11조), ③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④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대효과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 :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는 전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센터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무분별한 지방투자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지방투자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중립적인 시각과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시성, 선심성 사업의 무리한 투자, 적격성 없는 민자 유치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투자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충분한 사전검토의 결여로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을 초래하여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연장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사업에 착수한 이후 타당성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이 상실되며, 심지어 태백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된 시설의 부채 등이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재정수요의 급증으로 날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자원배분이란 측면에서 볼 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고려가 미흡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용상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센터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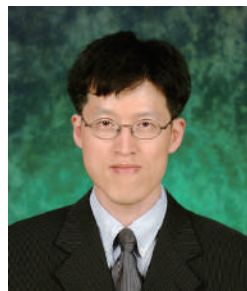
#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의와 향후 발전과제

## 머리말

지방재정의 규모는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1995년 민선단체장이 당선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 위치는 가히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만큼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세출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루가 다르게 행·재정 측면에서 ‘자치(自治)’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중앙으로부터의 행·재정적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강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특히 재정 지출, 집행에 있어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지출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은 4년에 한번 선거를 통해 다시 재임 및 삼선까지 가능하다. 이는 결국 12년 동안 선거 공약을 통해 본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단체장과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행정수요와 이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어느 한 사람만의 의지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손뼉은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좋은 의미이거나 나쁜 의미이거나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지방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임을 잘 말해 주는 대목일 텐데, 결국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투자사업은 지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적의 사업인지에 대한 사전적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검토가 꼭 필요하다. 물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책사업비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만큼 보장되는가는 더욱 중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적격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이 소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 3개의 소절에서는 왜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의 의의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 11월 29일부터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타당성 조사의 역할과 특징

오늘날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이 되는 예산편성지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투자심사제도, 그리고 지방채무의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 발행한도제도, 그리고 계획적인 재정의 집행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 중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의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투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부적격 사업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다.

투자심사제도란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 및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1995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심사대상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자체심사와 의뢰심사 등 심사 제도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타당성 조사의 가장 큰 의의는 역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중장기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복투자 방지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타당성 심사 및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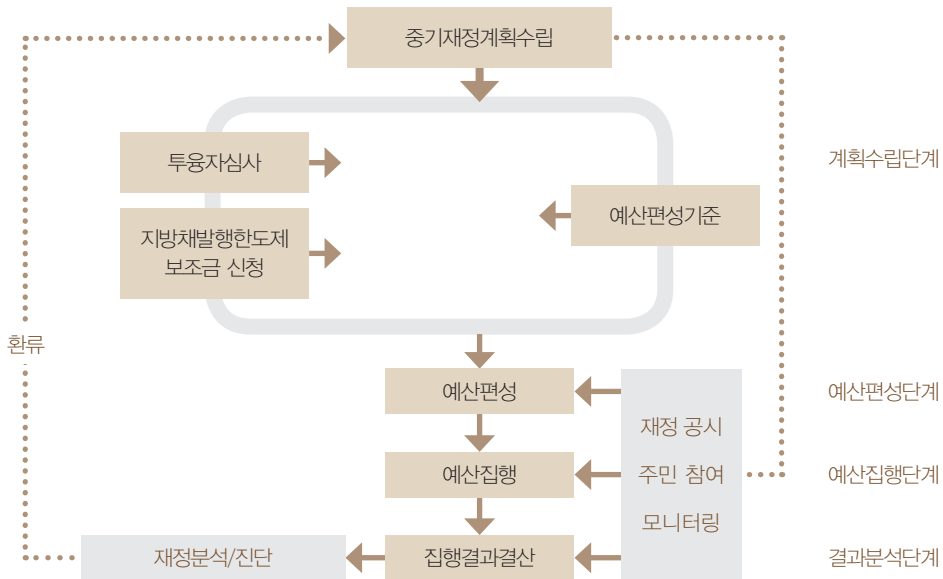
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함으로 예산낭비를 해소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조기현외,2013).

국내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동향도 유사하여 정부의 부채비율 증가, 공공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공공투자 확대가 정당한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많다(박현,2014)

이에 대해 최근 공공투자관리체계는 1994년 총 사업비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7년에 국가의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 이후 1999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타당성재조사 제도와 사후평가제도를 함께 도입하게 된다. 이후 2003년에는 타당성재조사 지침이 제정되며, 2006년 이후 타당성 재조사의 강화, 수요예측재조사가 도입되는 등 그 과정 별 새로운 혹은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쪽의 제도적 변화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투자심사제도의 지방재정 운영의 구조 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이

〈그림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구조



자료: 조기현 외(2013)에서 재인용

검토가 통과되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이후 투융자심사 이전에 실시하게 되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심사와 정의 하위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이후 투융자심사 이전에 실시하게 되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심사과정의 하위과정에 사전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투자심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는 사업을 스크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는 투자심사제도의 하위제도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완공까지의 추진절차 등을 심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대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사업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크게 민간투자사업, 국가사업, 지방사업으로 구분하며, 일반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그리고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사업

〈표1〉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유형과 특징

사업유형		제도유형	대상(이상)	목적	관계법령	특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2,000억 원	민간투자판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수익성
국가사업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사업추진여부 투자우선순위	국가재정법 (제38조)	경제성, 정책성
	교통시설	타당성과 사전타당성 병행	100억 원	사업추진여부 투자우선순위 민간투자판단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 제21조)	경제성, 재무성
지방사업	공 통	투자심사	20억 원	사업추진여부	지방재정법 (제32조)	경제성, 정책성
	일반사업	사전타당성	500억 원	투자심사자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사업추진 적정성
	공용건물	사전타당성	100억 원	투자심사자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사업추진 적정성

자료: 조기현 외(2013:20)에서 재인용



의 타당성 조사 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즉 지방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이전의 조사 사업은 사전타당성 제도로 제도유형을 하고 있다.

## 향후 과제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막 지정되었다. 기대가 크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①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만한 평가지침 개발이 시급하다. 이것은 조사 방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KDI나 KISTEP의 선행연구들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국가단위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축적한 노하우는 후발주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학습을 통해 숙지하고 센터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가지고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에 있어 독자적인 평가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KDI의 경우에도 일반지침 및 분야별 지침을 매년 수정 보완해 오고 있다. 이 역시 정답이 없을 수 있다. 보완이 거듭되면 서 타당성 조사의 '바이블'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② 일관성이다. 유사한 사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한 가지 잣대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속히 일관된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들은 이력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 DB를 구축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조사 사업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③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사업과 다르게 지방사업은 지자체마다 처해 있는 지역적 특수성, 지역 낙후도,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지표의 예를 들면 지역낙후도 지표에는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 비율, 도로율, 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 의사수, 노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이 반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에 대한 AHP 항목별 가중치를 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④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박현, 2014). 이는 타당성 조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의 자세와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외부 참여 연구진들과의 팀워크와 함께 학제 간 연구 평가

팀을 구성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절차와 규정에 입각한 내부 점검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검토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비정형사업에 대한 조사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다. 현재 비정형 사업들에 대한 편익산정기법 중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향후 지역마다 사업 유형이나 성격이 점점 다양화하고 있으며, 사업도 복합적인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성격에 맞게 적절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지침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분야별 지침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조사 방법론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정형사업들처럼 복합적인 시설이나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과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현(2014), '지방투자사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
- 조기현 외(2013),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세부기준 마련 연구」보고서, 안전행정부
- 안상훈 외(2008),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도시 속에서 낭만의 예술공간과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 평택시

평택호는 자연, 문화, 레포츠가 함께하는 복합 관광 휴양지이다. 호수 한가운데 수면위로 치솟는 수중고사분수가 보는 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주며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시설이 마련된 평택호 관광단지를 소개한다. 정취 있는 목조 수변테크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주변 경관도 감상하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호반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여유를 즐기며 휴식을 취해보자.



## 평택(平澤)은 노을이 아름다운 고을

국민애창동요 중의 하나인 '노을'이 탄생한 곳이다. 1978년 화가 이동진 씨가 평택 안성천을 따라 걷다가 노을 지는 모습이 너무 황홀해 시로 풀어냈다. '너무나 아름다워 화가조차 그림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던 저녁 노을' 지금의 평택호(아산호)부근이 바로 그곳이다. 이제 초가지붕과 둥근 박은 볼 수 없지만,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와 황금 들판, 숯불처럼 발갛게 타오르는 노을은 여전하다.

##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평택호 예술관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있는 전시관 겸 다목적홀인 평택호 예술관은 독특한 피라미드 형태의 외관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곳에서는 미술대전, 서예대전 등 국내외 우수작품 등을 전시한다. 특히 봄이 되면 예술관 앞에 활짝 피는 유채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중고사분수

호수 내 설치된 105m의 수중고사분수는 행사, 환경, 계절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분수 연출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105m의 물줄기는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 주며, 야간에는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이용한 분수쇼도 연출된다.



▲ 평택호 예술관



▲ 평택호 수중고사분수



▲ 평택호 소리의자



▲ 평택호 수변데크 야경

## 자연친화적 산책로 목조수변데크 야경

평택호 경계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목조수변데크는 현대적 감각으로 조형되어 있으며, 평택호의 경관을 편안하게 걸으며 감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산책로이다. 목조수변데크를 걷다보면 일곱 빛깔의 수중고사분수와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 자연에서 즐기는 휴식 모래톱공원

모래톱공원은 호수 내에 모래를 준설하여 갈대숲, 창포, 부처꽃 등이 식재되어 자연의 생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모래톱을 이용해 꾸민 실크로드 공원은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무대설치와 쉼터 등이 자리하고 있어 전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전통문화의 허브 한국소리터

평택시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잡은 한국소리터는 공연장과 야외공연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민속문화 예술인들의 보유재능을 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소리터는 아름다운 평택호와 함께 시민들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문화·예술·관광이 함께하는 특성화 장소로 꼽을 수 있다. 공연프로그램으로는 주말 상설공연, 소리터 전통 상설공연과 소리터 유랑단이 직



접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이 있다. 그리고 문화다방, 레코딩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예술단체들의 교류를 도와주는 레지던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 문화 강좌와 문화예술 워크숍, 도예, 댄스, 음향교육, 악기체험은 나들이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호수 위 연주하는 의자, 평택호 소리를 입다

음악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흐르고 호수의 반짝이는 빛이 흐르는 곳. 그 곳에 편히 앉아 있다 보면 아마도 절로 사색이 될 것이다. 평택호의 예술가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에서 매력적인 음악이 흐른다. 경기관광공사가 평택시와 손을 잡고 평택호 관광단지 내 수변테크길과 모래톱공원에 평택의 문화 콘텐츠를 담은 ‘소리의자’ 10점을 설치했다. 그 동안 멋진 호수를 감상할 수 있고 탁 트인 호수 산책길로 유명했던 평택호관광단지가 이제 ‘소리의자’라는 음악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기술이 조합된 의자가 생겨 편히 앉아 호수 빛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 평택호에서 즐기는 시원한 요트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평택호는 윈드서핑과 요트 동호회의 여유롭고 짜릿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극장과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평택호 관광지 내에는 “닥터 이방인” 등을 촬영한 드라마세트장과 가족 놀이공원도 있어 주말이면 나들이객들로 북적된다.



▲ 평택호 윈드서핑



▲ 억새축제



평택시의 또 다른 매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먼 거리가 부담스럽다면 평택에서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둘레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가족, 연인과 함께 부락산 둘레길, 바람새길, 갈대·억새길을 걸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 숲향기가 물씬 풍기는 부락산 둘레길

평택 북부의 부락산 둘레길은 지산초록도서관~부락산 혼치고개를 돌아오는 총 10km의 구간으로, 기존 폐도됐던 자전거 도로에 야생화와 안내판,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돼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부락산 둘레길보다 먼저 조성된 부락산 이충분수공원(근린공원)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인근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원에서는 인근 덕암산과 함께 다양한 단풍도 즐길 수 있다. 부락산 성불사 일원에는 부락산 산림테마공원이 조성된다. 부락산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9만9000㎡의 산림테마공원 부지에 자연관찰원, 물놀이장, 체험학습장 등을 만들어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방침이다.

## 자연친화적인 낭만·힐링 명소, 갈대·억새길과 소나무숲길

평택 남부에는 군문동부터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안성천을 따라 갈대·억새길 2km가 조성되어 있다. 강을 따라 펼쳐진 갈대와 억새 사이를 걷다보면 노을지는 군문교를 볼 수 있다. 이곳은 갈대와 억새의 정취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가을에 원평동 군문교 일원에서 '원평나루 역사·노을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축제는 공연 및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평택 서부에 위치한 현덕면 마안산길은 개발이 제한된 관광특구지역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생겨난 산책로로, 3.5km의 소나무 및 다양한 수종의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멋진 숲길을 즐길 수 있다.

###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고덕면 바람새길

평택 북부지역에 있는 바람새길(6km)은 고덕면 궁1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나루터 복원, 캠핑장, 방문자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진위천을 끼고 있는 궁1리는 토종민물 어류와 꼬리명주나비, 철새 등의 보호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뚝방길과 농로에는 역사 및 갈대 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경관이 매우 빼어나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생태습지, 연꽃군락, 쉼터 등이 마을회관 뒤쪽으로 펼쳐져 있어 눈길을 끈다. 바람새길은 38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시내버스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하기 좋은 통북천 자연형 생태하천길·자전거도로

통북천 자연형 생태하천길은 하천 친수공간을 활용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시켜 시의 아름다운 도심 하천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다양한 꽃과 나무로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도 여가활동 및 생태학습이 가능해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통북천 제방 위에 조성된 데크 시설 쉼터에서는 통북천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평택호 호수 제방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수변관광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6월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까지 평택호 순환자전거도로 12.2km 구간이 개통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이 완공되면 평택호를 둘러싼 평택호 순환자전거도로는 총 45km에 달하게 되어 마라톤 코스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평택시는 자전거도로 조성과 함께 예술관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확충해 이 일대를 해양 레저관광지로 다질 계획이다.

**제24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9:30~10:2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제** 지역자산 조사 및 활용센터 설립방안  
**발 표** 김대욱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 24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김대욱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역자산 조사 및 활용센터 설립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46

47

**2015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  
워크숍 개최**

**일 시** 2014년 12월 15일(월) 14:00~15:0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2015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지방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일 시** 2014년 12월 18일(목) 9:30~12: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 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지방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박헌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김정섭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행정사무관이 세미나 참석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사업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27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22일(월)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세미나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과 22일 월요일, 양일에 걸쳐 '제27차 연구심의위원회(정책수탁용역자체연구과제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 제1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2015년 1월 15일(목) 9:30~10:2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발 표** 안영훈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2015년 '제1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 제90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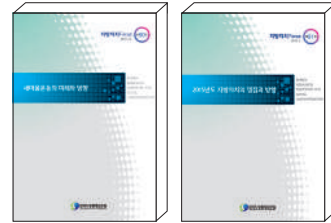
제 목 새마을운동의 미래와 방향

저 자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조직분석진단센터 수석연구원)

### 「지방자치 Focus」 제91호 발간

제 목 2015년도 지방자치의 쟁점과 방향

저 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 상반기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창조와 소통의 정부 3.0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2.25(수) ~ 2.27(금)
		제2기 4. 8(수) ~ 4.10(금)
		제3기 5.20(수) ~ 5.22(금)
내부통제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18(수) ~ 3.20(금)
		제2기 5.13(수) ~ 5.15(금)
		제3기 6.24(수) ~ 6.26(금)
지방규제개혁	3일(비합숙) (19시간)	제1기 4. 1(수) ~ 4. 3(금)
		제2기 5. 6(수) ~ 5. 8(금)
		제3기 6.17(수) ~ 6.19(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11(수) ~ 3.13(금)
		제2기 4.22(수) ~ 4.24(금)
		제3기 6.10(수) ~ 6.12(금)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25(수) ~ 3.27(금)
		제2기 4.29(수) ~ 5. 1(금)
		제3기 6. 3(수) ~ 6. 5(금)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3. 4(수) ~ 3. 6(금)
		제2기 4.15(수) ~ 4.17(금)
		제3기 5.27(수) ~ 5.29(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el. 02-3488-7361 / yjtak@krila@re.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만 세입자와 함께 합니다! 월세 지원하는 주거급여



##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위 가구의 소득수준

### 달라 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131만원→173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단위 : 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64	109	141	173	205	237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 시행 시기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시행시기(신청시기)는 별도 홍보예정입니다.



#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하세요!

국민의 아이디어에 실현가능성을 **맞추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주는 창조경제타운!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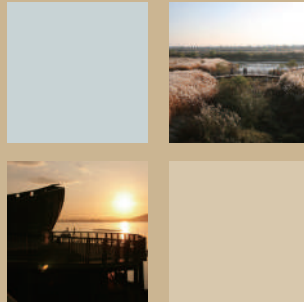
지금 바로 **창조경제타운**을 검색해 보세요! ▾

검색

## 창조경제타운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분들에게 멘토링을 연결시켜주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청업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www.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5